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2024년 3월 12일 화 10시30분~13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10:30~10:40)

-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발표 (10:40~11:10)

-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 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

토론 (11:10~12:00)

-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 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
-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
- 유일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사무총장
-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오찬 (12:00~13:30)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안민정책포럼, 자유기업원,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한국선진화포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30분~13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조연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사회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발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

토론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

유일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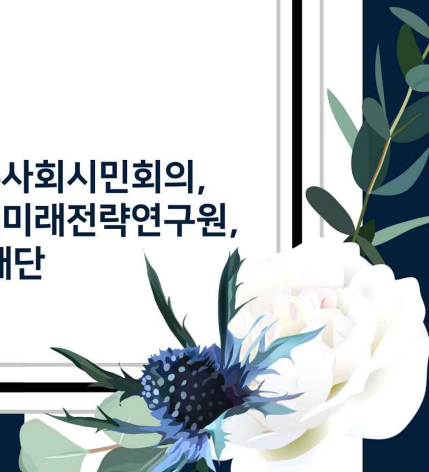
조성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사무총장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본 행사는 오찬 미팅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안민정책포럼, 자유기업원,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한국선진화포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한반도선진화재단



410 총선의 의의

유일호

의의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 법치 확립
 -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통찰을 넘어 이에 근거한 미래의 비전
-

시대정신의 변화? 주류세력 교체?

- 여당은 지난 20년간 당내 권력을 분점하던 ‘친이’, ‘친박’의 주역들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
 - 야당 역시 86 운동권 세력의 퇴조
 - 세월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세력 교체이기도 함
-

참고; 초선의원 비율

- 16대 40.7%, 17대 62.5%, 18대 44.8%, 19대 49.3%, 20대 44%, 21대 52%, 22대?
 - 낙천, 낙선, 불출마 등으로 직전 선거에 국회입성을 못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까지 포함하면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짐
-

선택의 기준

- 국가관이 투철한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가?
 - 법질서를 지키는 후보
 - 강성팬덤의 눈치를 보지않는 후보
 - 부패하지 않은가?
 - 공사구분이 명확한가?
 -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는?
-

21대 국회 대표적 문제법안

- 양곡관리법(개)
 - 간호법(제)
 -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 방송3법(개)
-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예

- 노동개혁
 - 상속세 등 세제개편
 - 규제약법의 개정
 - 재정준칙 확립
 - 교육교부금 등 교육재정 개혁
-

-
- 국회의원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갖추어야 상기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22대 총선의 의미와 의제 그리고 선택기준

박명호 (동국대학교)



총선의 의미 – 심판론의 충돌

정권심판론 vs. 거야심판론 vs. 양당심판론



총선의 의제 –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설계

양극화 극복

정치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양당패권의 진영정치 극복



“구정물 같은 공천”

Vs.

“기득권 꽃아내기”



경제/균형/분권 문제해결의 정치

정치개혁의 로드맵
선거제도/의회/정당
2032년 개헌



총선의 선택기준

공공성 vs. 생계형 정치인 & 샐러리맨형 정치인



의제를 가진 사람 – 왜? 무엇을? 어떻게?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사람



大타협의 정치와 能力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

박 명 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올해 영국 킹스칼리지 정책연구소와 입소스가 전 세계 주요국 2만 3천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문화전쟁의 대한민국”이다. 문화전쟁은 단순한 이견(disagreement)이상을 의미한다. 문화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못한가에 대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견해”의 대립을 말한다.

“세계의 문화전쟁”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의 긴장과 대립이 심각하느냐를 물었다. 한국은 12개 조사항목 중 7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2위가 1개 3위가 2개였고 12개 조사항목 모두에서 28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한갈등공화국’이다.

1위를 기록한 지표들은 ‘진보-보수의 이념대립(87%/평균 65%), 남녀 대립(80%/평균 48%), 고학력자-저학력자의 대립(70%/평균 47%), 여야 지지자의 대립(91%/평균 69%), 빈부대립(91%/평균 74%), 세대대립(80%/평균 46%) 그리고 종교대립(78%/평균 57%)’이다.

여야 지지자의 대립은 이념대립과 함께 ‘인식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 때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언론이 어떻게 이견이나 견해의 대립을 대중에게 제시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필요와 정도 이상으로 갈등 양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확증편향의 확대 재생산’이다.

갈등관리와 해결주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다. 8월 중순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에 잘 대처할 정당’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정당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가 39.3%로 가장 많았다. ‘갈등의 정치적 관리실패’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갈등이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빈부 그리고 세대대립’ 등이 대표적이다.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정치적 관리실패는 한국형 다수결 민주주의의 ‘독점의 정치’에 기인한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인 독점의 정치는 현실적으로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 그리고 정당 집단주의와 무책임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점의 정치는 ‘배제의 정치’로 정치적 포용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적 갈

등은 정치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능력의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협치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공공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처방과 리더십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준연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또한 결선투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년 실패한 개헌논의의 성과는 여야모두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탈피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직선 대통령과 의회 다수와 총리’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헌이후 우리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추가한 헌정경험을 갖고 있다. 의원의 장관겸직이 대표적이며 국회의장 출신총리까지 배출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여야 공감대를 직선 대통령과 국회 추천/선출의 총리’의 분권형 국정운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교한 제도설계능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내각구성권과 국회 해산권 그리고 총리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의 조합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로 설정하고 우선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를 국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방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사생결단식 대선에서 대타협의 정치를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한갈등공화국의 대안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타협의 정치뿐이다. 야당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 대선국면이다. 여야의 고민을 기대한다.

4.10 총선의 의미와 선택기준

2024. 03. 12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황승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정신

자유, 인권, 법치,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전략
기회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칼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

-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국유화
-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 부과
- 토지, 은행, 교통 및 운송수단, 공장 국유화
-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의무 부여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개헌

건국헌법의 사회주의국가 통제경제조항들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경제해방'(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

-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 국영의 원칙에서 사유, 사영의 원칙으로 이전
- 천연자원의 국유조항 삭제
- 산업의 국유 공유조항 삭제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정신: 농지개혁으로 신분평등, 경제적 자유권 가진 국민 탄생

"공산제도는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이 되어 정부에 바치기만 할 뿐이니 전에는 부호의 노예였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현금 우리나라의 자본은 대부분 토지에 있나니, 지주들이 다 토지는 내어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주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본을 얻게 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이니, 많은 연구로 해결책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후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나?

개인 지향 : 공동체 지향

자유 지향 : 평등 지향

시장 주도 : 국가 주도

책임과 의무 : 복지와 권리

친기업 : 친노동

상속세 폐지 : 상속세 강화

미국과 함께 하자 : 중국과 함께 하자

일본을 닮은 사회 : 중국을 닮은 사회

미국과 일본과 한패가 되어야 : 중국과 북한과 한패가 되어야

희생이 따르는 이기는 전쟁 : 희생이 없는 양보하는 평화

부강한 나라에 대한 몇가지 조건

국가의 생존 방법: 생산, 교환, 구걸, 약탈

국가의 경쟁력: 생산, 조세, 교육, 여행, 국적

근대적 사회의 조건: 개인, 자유, 시장, 법치

21세기 새로운 계층 분류: Anywheres, Somewheres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4.10 총선에서
선택기준은?**

22대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 기준에 관한 토론문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지금의 패러다임에 갇혀 하이어나처럼 죽고 죽이는 물고 무는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이번 총선은 그 가늠자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거대 야당 국회에서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타협과 통합을 외치지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일상화되었다. 결국 돌파구는 개혁이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을 등에 업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예측해 보자. 만일 야당이 승리하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되살아나고,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심지어 알바비까지 관여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퍼주기 보조금’, ‘자기끼리 나누기’, ‘묻지 마 정책’ 등이 수없이 남발할 것이다. 미래는 없고 푸줏간에 칼 가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승리하면 이제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펼칠 것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활로를 마련할 것이며, 무분별한 정부 보조금을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미래 생명산업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을 만들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180석을 주었어도 개혁하나 하지 않은 국가의 법을 만드는 거대 야당 국회이다. 이번 총선은 국회를 평가하는 선거이며, 당연히 3년 후 대통령 선거에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선거여야 한다. 그것이 정의롭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의 총선이길 바란다.

총선의 주요 의제는 의료와 교육이다. 의료는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 중 국방만큼 최일선에 있다. 생명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도사리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사수하는 의사협회는 노동조합보다 더 단단한 성역이었다. 그 어떤 정부라도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독선적 말은 하루하루 병실에서 수술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돌보고 미래 생명산업을 이끌어 갈 의료인 양성은 국가의 버팀목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코로나 사태로 그것을 직감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직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의료인이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닐 것이다. 모든 의료인은, 기득권을 끝까지 쥐고자 하는 자들의 독선으로 어떻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을 양성하여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사들에게 우리는 환호의 함성과 따뜻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교육 역시 이번 총선의 주요 의제이다.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하면서 미래는 암울하다. 배울 사람이 없어지고 일할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반만년의 역사

를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우리의 자녀가 인재가 되거나, 번영의 한국에서 직업을 가져 꿈을 펼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위해 5천만의 국민이 매년 태어나는 23만 명, 전체 인구의 0.46%를 세계적 수준으로 보육하고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무능력이다.

선택의 기준은 간단하다. 시장에서 사과를 살 때 때깔이 좋고, 누가 봐도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택한다. 인간이 인간을 선택할 때 오류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선택해 보지 않았는가. 첫째 기준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당이며 훌륭한 사람이다.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라고 하지 않는가. 즉, 거짓과 위선이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신실하여 법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은 국민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만큼 많다. 둘째,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등. 이런 것을 최소한 확인하고 공천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떳떳하게 여긴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공천’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평균소득만큼만 받아 가면 된다. 국민을 대표하기에, 자기 손으로 연봉을 결정하는 집단인 국회는 자기 손으로 결정되지 않는 ‘자동 시스템’으로 연봉을 결정하면 정의롭다. 파이를 자른 사람이 제일 뒤에 선택하는 것이 정의롭듯이 전년도 국민 평균 연봉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을 정하면 된다. 특권을 스스로 제어하는, 없애는 정당을 선택하면 국민은 이롭다. 의원들이여 돈이 아닌 진정한 제1 봉사자를 자청하라.

국민을 통합하려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 지금의 의료 개혁처럼. 자연히 그 개혁 속에 국민이 통합된다. 국가는 이념과 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개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 개혁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동안 기득권 속에 공생했던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개혁도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처절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다.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바라보는 22대 4.10. 총선 아젠다

김기창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에 관한 총선 아젠다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갱신거절권(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관련, 임대인의 실거주 관련 입증책임 규정의 부존재 문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건 급증 -> 사회문제화 및 혼란 발생 -> 임대차보증금(전세금) 관련 시세 요동 -> 입법 권력의 변동에 따른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불확실성 초래 -> 가장 기초적 기본권인 주거권을 둘러싼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증폭 결과
- 실제 재판 사례 관련, 하급심에서 임차인에게 실거주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이후 소송 비용 등의 부족으로 임차인 항소심 포기하고 퇴거, 다른 유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실거주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판결 -> 사법 전문가인 판사 조차 법리 혼란 --> 일반 국민의 사법신뢰 타격
- 퇴거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법(주임법 제3조의6 제3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마저 등장하였는바,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적대감 잔존 이유로 향후 법리적 갈등의 빌미
-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념적 포퓰리즘에 기댄 입법 권력자의 귀책이라 할 것 ->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적 이념의 확립을 전제로 치밀하고 향후 예측가능성 있는 전문적 입법정책제안과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노력 절실

■ 재건축초과이익확수에관한법률 관련 총선 아젠다

- 해당 법률은 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를 거쳐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의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 비록 현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수익성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이중과세 등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 이에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입법개정의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지속 반복되어왔는바, 21대 국회 임기 동안 무려 11회 정도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입법의안은 4회 정도에 불과

-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고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되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 물가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비판의식 확대 중
-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일평생 부동산만을 소유한 고령자는 현행 재건축정책과 공사비 및 과세정책에 따를 때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기하고 타지로 사실상 강제 이주당해야만 하는 상황
- 입법정책적 노력으로 재초환 환수에 대하여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유력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초환 폐지 공약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상황인바, 이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에 부합하는 총선 아젠다라고 평가됨.

■ 2024.2.26.자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적 결단 관련 총선 아젠다

-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치와 주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부 증대와 주주환원 강화의 시발점이 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적경제질서의 헌법적 관점에는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
- 다만, 주주환원으로 대표되는 정책 관점에서 바라볼 때, 관련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추가하자는 논의 확대 중인데 주주 가치의 훼손에 대한 이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고 기업의 진취적 투자 방해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신중한 논의 필요
- 결국,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회사 정관에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적 경영실적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자율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실효적이라 보임
- 아울러, 한국 기업문화의 주요 특징인 대주주의 안정적 기업지배 관점에서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속세 또는 법인세의 적극적 개편 정책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주주의 종속적 관계로 변질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외이사제 및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선진적 기업거버넌스 개선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토론의견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연환경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갉아 먹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환경훼손은 자연환경자원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는 행위를 방임하거나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자연자원의 독점은 인류의 공익을 저해하는 비민주적인 불평등 행위이며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환경보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임무이지만 관리 방향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단편적이고 균형을 잃은 정책을 택하기도 한다. 환경 분야의 문제 제기는 흔히 일부 사항을 극단적으로 평가하면서 과대평가하여 감성적 판단에 흐르기 쉽다. 사안의 다면성을 평가하지 않고 단면만을 감성적으로 부각하여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합리성이 부족한 환경규제가 발생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반면에 정작 규제가 필요한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여론과 국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환경규제 정책을 보류함으로써 방임하는 사례도 많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막아야 함에도 일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부딪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담론을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시행의 동력을 얻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가 미흡하였던 1차산업 분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여, 부처간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 토론문〉

유일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요즘 극장가에 이승만대통령 바로 알기에 관한 다큐 영화 두 편이 상영되고 있다.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이 그것이다. 특히 ‘건국전쟁’은 과거 민족문제연구소와 좌파 사학자들이 만든 ‘백년전쟁’과 대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혐오와 조롱에서 존경과 찬사로 바뀌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전쟁의 시작이다. 문화전쟁은 역사전쟁이고 이념전쟁이며 가치전쟁이다. 문화역사계에 강고한 진지를 구축한 좌파들은 철 지난 이념논쟁이라고 초점을 피하지만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논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문화전쟁은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소설, 연극,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작가는 시대의 산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정래씨가 배우 문성근씨와 조국 구하기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한다. 산소가 아닌 스스로 탄소 작가임을 공표한 것이다. 인기를 등에 업고 특권과 반칙으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국회에 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문열작가가 촛불시위에 한 마디했다고 분서 운운하던 시절과 대비된다.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도 종북세력과의 문화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뒤집힌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가의 정통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느냐에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역사와 반 역사, 팩트와 허구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대선 등 큰 선거에서는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공천과 지역 공약에 매몰된 듯하다. 금년에 있을 미국 대선을 분기점으로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정도로 변할 것이다. 이제는 국력을 모아 통합을 이루고 북한과 전체주의 세력에 대비해야 한다.

프랑스의 삼색기를 보면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그중 시민정신을 표현하는 붉은 색 ‘박애’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부합한다. 요즘 세상은 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듯하다.

이제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시대정신인 대한민국 공동체의 부활과 박애사상의 소명감을 지닌 선량들을 뽑아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결국 공화주의 가치관과 박애정신에 대한 교육이 국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후보가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2.1%, 국회예산정책처는 2.0%, 한국개발연구원은 2.2%를 각각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좀처럼 만족할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의 국가라는 근본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64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과도한 법인세·상속세 부담도 혁신 경영을 방해하는 반시장 환경 요소다.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대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

지난 2023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즉각 구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5년 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퓰리즘 파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리스가 과감한 친시장 개혁에 나서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모범 선례다.

22대 국회에마져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향후 마이너스 성장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경제 논리를 외면하고, 정부 개입과 재정 지출에 의존해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시각에 사로잡힌 정당과 정치세력이 입법권을 남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이어질 것이다.

코리언 르네상스를 향하여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I. 대한민국, 문 디스토피아의 재앙을 벗어났는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5년의 민주공화국의 헌정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5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災殃)의 세상”을 만들었다.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고 체제파괴(전복)에 광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했고, 헌법을 유린했으며, 나라의 곳간마저 탕진했다. 문정권은 대한민국을 거짓과 기만의 아수라 지옥을 만들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권력형 부패공동체, 내로남불의 위선, 노골적인 도둑정치로 판명 났다. 우리는 말레보지아(Malevogia, 사기지옥)를 경험했다.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media)』에서 적시한 것처럼, 문재인은 “과멸한 사람들에게 끼이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라는 ‘지옥(inferno)’의 저주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은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기만의 국민약탈 정치, 종북·종중의 반(反)문명적 친(親)전체주의 역진은 간신히 중지시켰다. 이 기적 같은 박빙승리(24만표 차)는 상식과 공정의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유문명예로의 합류를 희구한 위대한 자유국민이 결집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문 디스토피아의 종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은 대한민국 호는 안팎의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II.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위’라는 집단주의적 광장정치를 동원하여 집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촛불혁명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변경하는 집단주의적 ‘주권자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생성적 권력’을 내세웠다.¹⁾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나 스스로 입헌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유사전체주의적(qusai-totalitarian) 폭정을 휘둘렀다.

1) 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8쪽, 2017.

문 정권은 ‘혁명정부’를 선언하며 공포정치형 적폐청산을 감행했고, ‘자유’의 가치를 소거하고 지방분권국가라는 유사연방제를 개헌을 시도했으며, ‘생성적 권력’에 근거한 대통령 독재를 펼쳤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헌정정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다. 여당은 입헌주의적 헌법기관이 아니라 체제변경의 전위대로, 사법부는 지연적, 선택적 정의의 남발하는 정치적 패거리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은 체제변경적 헌법 개정이 무산되자, 권력구조 개편에 착수하여 공수처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수완박법 등 위헌성 법률 양산했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마비되거나 형해화(形骸化)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상화 과제의 출발은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독재, 방탄 국회, 탄핵과 약법 양산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의 회복은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 정권이 훼손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은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다. 한국의 국회는 헌법과 법률의 전당이 아니다. 국가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불능국회이자 난투극 국회일 뿐이다. 다가올 4.10 총선에서 다수 야당의 난장판 폭정은 엄중히 심판 받아야 한다.

Ⅲ. 자유·공화주의의 내면화와 활성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 민주주의의 분출이다. 노르베르트 보비오는 “과잉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옥죄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의 87체제의 역사적 의미는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타협을 통한 민주화’(Democratization by Trans-placement)의 이행이었다. 87체제는 한국 정치변동이 산업화와 자유화, 시민사회의 성숙, 국제적 환경이 잘 복합되어 타협에 의해 이행된 모델로 혁명과 반동의 악순환을 피하고 국가와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순조로운 민주화 이행을 지나 1993년 김영삼 정부를 지나면서 한국은 과잉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탈냉전 세계화, 독일의 통일, 미·중협조의 국제질서, 한반도 통일열기의 분출로 탈이념 시대의 과잉 이념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족패러다임’에 의거한 친북 정권의 등장, 이에 따른 급진 운동권 세력의 사회정치적 진지구축과 제도권 진출로 극단적 이념정치에 빠지게 되었다. 2002년 미선·효선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쳐 2016년 박근혜 탄핵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른바 ‘촛불집회’의 광장정치가 직접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압도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촛불광장정치’였고, 586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다.

집권 문86 세력은 히틀러의 영도자론, 레닌의 민주집중제, 김일성의 수령론, 마오의 주석 독재와 유사한 '생성적 권력자'로서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과 자유는 억압되고 기업과 사회의 자율성은 질식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내재적 조건인 자유주의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와 함께 운동권 세력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국가의 일체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공화주의를 내팽겨 쳤다. 그들은 안으로 자유민주공화국 국가정체성을 파괴하고 민족지상주의를 내세운 종북, 종중 사대 정책으로 전체주의에 합류하려는 반동적 모험주의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국민을 약탈하는 '도둑지배(Kleptocracy)'를 자행했다.

문86 유사전체주의적 폭정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자유주의'의 의미, 제도적 원칙으로서의 '공화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자유주의를 내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기만에 불과하며, 공화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전제(專制)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의 회복은 바로 자유의 내면화와 공화제도의 활성화가 알파요 오메가다.

IV. 코리언 르네상스,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선택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도약의 방향은 잡혔다. 윤석열 정부는 입헌적 법치의 회복, 자유·공화주의의 내면화와 활성화 과제를 잘 풀어야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유·공화세력은 여전히 문86 세력의 반민주적, 반문명적 난장질, 불법·부정선거의 재연에 대한 염려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절망보다 희망이 앞선다.

희망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전략, 경제정책과 정치혁신의 삼각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첫째 이니셔티브는 문86 세력의 친(親)전체주의적 역진을 과감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변영으로 이끄는 문명의 길을 창조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복합적 공고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 자유(서방) 세계의 핵심국가로의 진입, 글로벌 사우스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과 재정팽창, 중국의 도발, 코로나 세계대전, 러시아의 불법전략 등으로 야기된 나라안팎의 복합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주도한 복합(경제)위기 대응의 결과는 OECD 국가 중 2위의 성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경제 지표는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셋째, 집권 여당의 혁신하여 4.10 총선에서 승리할 태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73년생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임명 후 집권여당은 세대교체와 정치교체의 동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하고 있다.

4.10 총선에 집권당은 다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의 전체주의의 황혼, 미국의 과 유럽의 보수화와 경제의 구조조정, 제4차 과학기술혁명의 급진전과 국제경쟁의 격화에 대한민국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을 이끄는 코리안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자유·공화 지식인은 코리안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기 위한 ‘가치와 정신의 전쟁’에 선봉에 서야한다.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민은 피로 산하와 계곡을 채우고, 땀으로 강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르고, 21세기 디지털 문명혁명의 최선도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 도래의 천시(天時)를 맞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지리(地理)적 응전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인화(人和)가 남았다. 문재인이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디스토피아’의 재앙, 망상적 선동, 내로남불의 거짓 위선과 패륜 정치로 우리는 인화(人禍)의 난장질을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제도권, 지식인, 국민이 모두 힘을 정신과 열정을 결집하여 인화(人禍)를 인화(人和)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총선의 의미와 아젠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 전 고려대 교수

□ 22대 4.10 총선의 의미

■ 국회운영 정상화의 분기점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교체도 함께 시행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이지만 거대 야당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복지부동이 지속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거대야당의 폭주 저지와 정부정책 집행의 원활화

-민주당의 '정책집행 발목잡기'를 위한 논쟁적 법안 제출과 정부는 법률안 재심의 요청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저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특검법, 쌍특검법 등 6건)

○4·10 총선의 결과에 따라 폭주지속 or 국회정상화의 여부가 결정

■ 대북·통일정책의 정상화의 기로

○기형적 대북·통일정책의 교정

-문재인정부의 친북적 대북·통일정책이 우리 주도의 자유통일 기반을 훼손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오히려 북한의 대남협박과 무력시위 등 도발이 더욱 노골화되고 핵을 앞세워 무력적화통일을 천명하고 있음

○자유·평화통일의 주도권 장악

-최근 북한은 2국가 체제를 주장, 통일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대남통일기구를 폐기함

-이는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계기로 판단됨

■ 거짓 선동세력 차단외 갈림길

-감성의 인기영합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이성과 합리는 실종됨

□ 22대 4.10 총선 아젠다

“정정당당 대한민국”의 건설

1. 올바른 선택: 거대야당의 폭주 저지 및 자유민주주의 세력 선택
2. 정직한 사회
 - 과학과 사실에 기반해 거짓과 괴담 차단
 - 선전·선동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차단
3. 희망찬 미래: 청년층에 희망, 중산층 복원, 통일한국
4. 강한 대한민국: 자강과 동맹, 가치중심외교, 경제영토 확장

□ 선택의 기준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법치주의, 미래지향

토론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가뭄으로 인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혈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라는 표현이 있다. 당시에야 가뭄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비교하면 낮은 경제성장률이다.들의 암사슴과 나귀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예레미야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가뭄 상태이다. 경제가 침체되니 저출산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앞이 흐려져 자신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 규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노조와 같은 이익집단의 힘은 강해진다. 스스로는 온갖 특혜를 챙기지만 상대는 억압한다. 자연스레 우리의 자유는 멀어진다.

법은 자유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기 입법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하는 요소는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활력과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과거 빠르게 성장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기해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압과 구속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은 발목 잡혔고, 시민들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자유 증진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경제성장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개방화에 통해 이룩하였다. 우리나라 가수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투어 콘서트를 한다. 영화는 또 어떠한가? 하지만 우리는 아직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여 해외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은 곧 사라질 지 모른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호하려고 애지중지 방 안에만 모셔둔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의대정원 증원 등의 현안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복잡한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시장경제와 개방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